

영세업체 옥죄는 공공기관 낙찰하한율 현실화 시급

최저가 낙찰제 폐지 불구 공공공사 적정액 낙찰 안돼
79~87% 수준 낙찰...부실공사·저임금 고착화 원인

■지난해 3월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천 수질정화시설설치공사 스크린관 구매에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한 업체가 기초금액 1억9500만원의 53%인 1억340만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다. 기초금액이 잘못 설정됐거나 업체가 손해를 각오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낙찰이다.

■올해 광주시가 발주한 남도학숙 건축공사에는 무려 692개 업체가 참여했다. 기초금액 131억원의 81.397%인 106억여원에 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전국 각지의 업체들이 낙찰하한율에 맞춰 우선 가격을 써내고 '윤 좋으면' 낙찰받는 시스템이 고착된 것이다.

광주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을 낙찰받을 때 적용되는 하한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예규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낙찰하한율을 정해 놓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지자체에 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이양하

고, 지역제한경쟁의 범위도 과감히 확대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실공사 ▲지역기업 영세화 ▲저임금 구조 고착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된다. 최근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사·용역에 이어 물품에서도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진 것이다. 종전까지는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었다.

이번 기회에 공사, 용역, 물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 낙찰하한율도 손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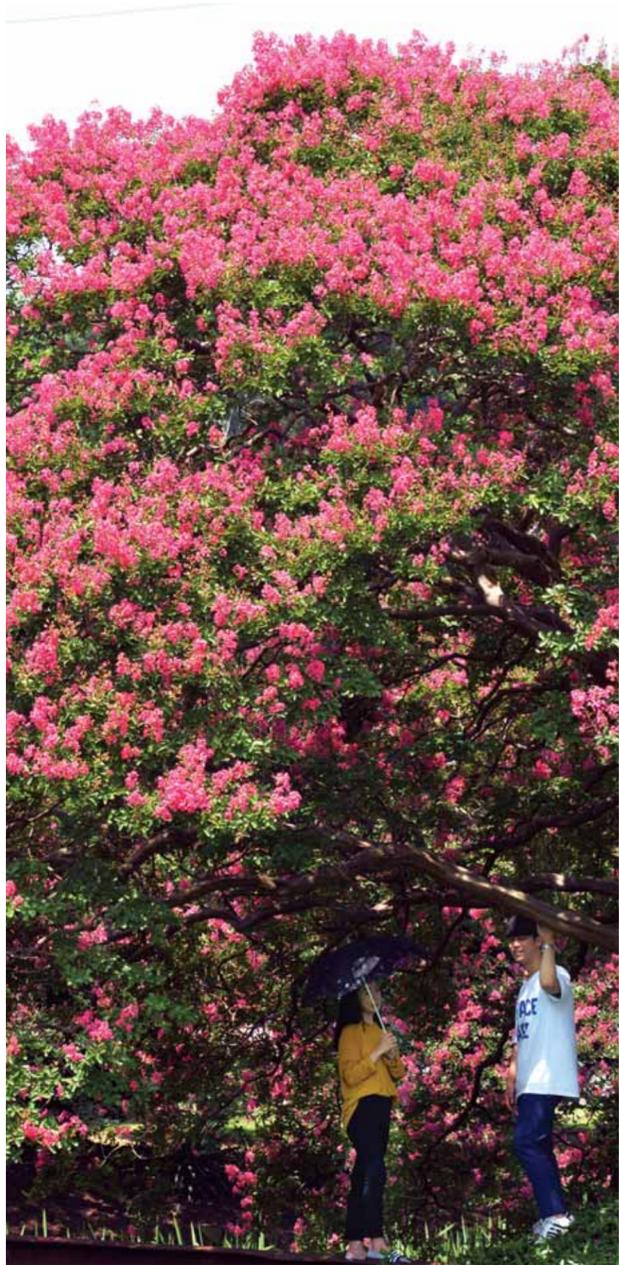
는 지적이다. 낙찰하한율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10억원 미만 규모는 87.745%가 적용되며, 50억원 미만(86.745%), 100억원 미만(85.495%) 등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줄어든다.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물품 등 입찰대상 성격에 따라라도 낙찰 하한율 기준은 모두 다르며, 대략 79~87%선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낙찰하한율이 적격심사나 공사·용역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가격'이 낙찰업체를 결정하고, 타지역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공사·용역 등을 할인한 가격에 지역업체에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을 받은 지역업체는 임금수준을 낮춰 공사·용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낙찰하한율을 결정하는 표준품셈이나 원가 역시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서 업체들의 불만도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우선 낙찰하한율에 맞춰 입찰에 참여한 뒤 운에 맡기는 구조"라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권한이 있어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백일홍 그늘 아래서 8일 광주 북구 매곡동 김용학 가옥(광주시지정 민속자료 3호) 앞에서 흐드러지게 피어난 백일홍의 붉은 자태에 매료된 행인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력 총동원 물리적 행동”

北 유엔 대북제재 반발
‘8말 9초’ 위기설 키워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며 ‘8말 9초 위기설’을 키우고 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출길을 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17호를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이날 새 대북제재에 관한 성명을 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더욱 광분하고 절박해졌다”며 “미국의 어리석은 행동은 이들의 멸종을 가속할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그들(미국과 동맹국들)이 미처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북한의 자부심을 배기하고 북한이 선택한 길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재확인할 뿐”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정부성명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17호를 전면 배격하며, 미국이 대북(對北) 압살 시도를 계속한다면 최후의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정부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 제재결의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 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양통신이 보도했다.

정부성명은 이어 “미국이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제재결의를 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견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합참의장 공군 출신 정경두...육참총장 장성 출신 김용우

軍 7명 장성 인사 단행
군사령관 2명 비육사

정부는 8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7명의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2면>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명의 군사령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인사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 뒤 취임할 예정이다.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쌍두마차로 군을 이끌게 된다. 이는 육군 중심의 군 구조에서 탈피해 해·공군



정경두 김용우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전 역량을 배양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참모총장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일고를 졸업한 김용우(56·육사 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임명됐다. 육사 출신을 합참의장뿐 아니라 육군총장에서 배제할 경우 군심(軍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경두 공군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공군총장에는 이왕근(56·공사 31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 임명됐다.

엄현성(59·해사 35기) 해군참모총장은 작년 9월 취임해 임기가 남아 있어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보좌하고 한미 연합작전과 전작권 환수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연합사 부사령관으로는 김병주(55·육사 40기) 3군단장(중장)이 정해졌다.

최전방 동부전선 방어를 책임지는 1군 사령관에는 박중진(60·3사 17기) 3군사령부 부사령관(중장)이, 서부전선과 수도권 방어를 담당하는 3군사령관에는 김운용(56·육사 40기) 2군단장(중장)이 임명됐다.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2작전사령관으로는 박한기(57·학군 21기) 8군단장(중장)이 정해졌다.

군 사령관 3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 2명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육사 출신의 기득권을 허물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동업, 라미란은 **NK뷰키트**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화
문의: 080-340-2222 www.nkvue.com